

전문가 코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윤리



장 진 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사회학 교수

Q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기업윤리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연관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3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보사회를 가져왔다면 인공지능, 로봇,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무인이동수단, 3D프린터, 가상현실, 합성생물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지능화, 초연결성, 융합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흔히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마주치게 될 기업윤리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나 제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업 측에서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부상 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상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 점차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지고 조건화되기에 왜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6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를 트위터 등에 선보였다가 16시간 만에 이를 중단시켰다. 악의적 이용자들이 각종 차별발언과 욕설, 자극적인 정치발언 등을 학습시켜 이를 따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험한 기술이나 논란의 소지가 큰 기술의 통제문제, 신기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의 새로운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맞춤형 무기 등을 생산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나 바이러스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무기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형 아기의 탄생이

가져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는 운전자/관리자의 책임인지 제조회사의 책임인지의 문제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Q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기업윤리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망의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의 설계 및 활용에 있어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치로서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면이 없는지, 특정 로봇이 인간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제조기술로 인한 위해도구나 무기 등의 제조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제품의 설계도나 소재의 활용에 제약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명공학적인 윤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차원 이상의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과 규제가 작동하겠지만 기업 역시 이의 이행 및 자체적 윤리규칙의 마련 등과 관련해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자와 제조기업간 책임소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윤리연구소

시사 특독

- 독일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사례 -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친환경 경영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예외 없이 연방정부차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CSR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엘이나 포드 스포츠와 같은 기업은 국가적인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민간 기업의 경영 실천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연립정부를 구성한 적도 있을 만큼 환경 우선의 정책이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도입한 「CSR 액션 플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액션 플랜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심이 되어 학교나 시민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기업의 신용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특히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SR-Made in Germany」를 부각시켜 독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한다. 또한 독일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 국제 표준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물론 전자기술 및 전자산업 중앙협회(ZVEi) 등 일부 이익단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제표준 도입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경영은 독일의 대다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약 94.3%가 CSR 활동 및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예컨대 M+W 그룹, 독일 철도, EWE, Otto 그룹, 퓨마, Xella 등 대기업은 2011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기후보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 역시 2010년부터 CSR과 친환경 경영에 모범이 되는 기업에게 매년 「독일 CSR」상을 수여하고 있다.

◎ 독일의 친환경 경영의 모범적 사례

기업 스스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바이엘과 포드 스포츠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화학 및 의약품 생산업체인 바이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이란 기업 이념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면서 10대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공정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캐나다에서부터 시작된 「책임을 다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헬스케어, 안정성, 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자발적 품질 경영 시스템인 HSEQ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경영으로 「바이엘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기업 자체 온실가스 방출 측정시스템인 「바이엘 기후 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염산에서 염소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력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에 있어서 3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노력에 힘입어 바이엘은 2008년 6월 연방 독일 산업협회에서 수여하는 친환경 기술 부문의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능성 의류제조사인 포드 스포츠는 사회 공헌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이다. 2001년부터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설·운영하여 사내 출산율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로 상승하는 등 성차별이 없는 기업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사회 참여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와 책임」이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포드 스포츠는 이미 1994년부터 「에코로그」 레이블을 도입하여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독일 중고의류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제품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인 반면에, 포드 스포츠는 자사 제품 중에서 단추나 지퍼 등 각종 부품 소재를 함께 녹여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포드 에코시스템」이라는 포괄적인 친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소비,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에코시스템」이라는 레이블을 붙여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최초의 스포츠용품 제조사이기도 한 포드 스포츠는 전 제조 공정 분야에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부여하여 친환경과 고품질 제공이라는 친환경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 친환경 경영실천이 윤리경영에 주는 시사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OECD 1위인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친환경적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친환경 경영은 「CSR 액션 플랜」과 같이 정부의 주도적인 사회적 책임의 큰 틀 안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에서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인증하여 기업이 CSR을 지속성장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듯이, 정부주도의 액션플랜은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겼던 관행과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을 국가적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민간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 기업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사의 자체적인 「바이엘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경영의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포드 스포츠처럼 사회 공헌과 「에코시스템」이라는 레이블을 붙여 수익과 기업 이미지를 함께 제고하는 경영 수완은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기업 스스로가 21세기의 선도적 기업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기술을 함께 접목시키는 경영 원칙은,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찌면 필수적인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http://www.csrforum.eu/F6/s4d-csrpreis.html>
- <http://www.iwr.de/news.php?id=17749>
-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Global Issue Report 10-009, 2010.11.2

보고서리뷰

- 4차 산업혁명의 4대 윤리문제 -

지구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과학적 파워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의 발전은 유전학/생식기술/신경과학/합성생물학 등의 생물학 및 물리학의 발전과 결합해 깜짝 놀랄 시너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새로운 힘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농업생산개선, 삶의 질 증대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지 모를 윤리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기업 일루미나(계놈 분석장비 제조업체)는 인간 계놈 프로젝트 이후 10여년 만에 개인 유전자 분석의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불과 1,000달러만 내면 내 몸에 있는 유전정보가 해독되고, 이 유전정보에 따라 질병진단 및 약물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 유전정보 분석 및 저장, 건강 데이터 전송 및 분석 그리고 진단에 인공지능 활용, 3D 프린터를 통한 신체기능 보완 등 바이오테크 혁신으로 보건의료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명해진 것은 생명체를 인간이 의도한대로 조작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윤리문제도 제기된다. 생명윤리 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연구기관 미국 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윤리문제"를 제기하며 선부른 접근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 기술개발이 최우선인가

우리는 자율적으로 개발되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나 군용로봇의 금지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치명적인 살상무기가 자체적으로 목표물을 선정하여 파괴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령이 곧 제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용로봇의 활용과 알고리즘 기반의 살상여부 결정 금지 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다.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기후변화가 문제되면서 행성조건을 바꾸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는 유리한 기후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해로운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진화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인간의 다양한 증강(능력향상)을 제공할 것이다. 기술진화는 질병 제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운동능력 증대/기억력 증대/공격적 행동 감소 등 우리가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고 싶은 능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증강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나 금지가 아니라 각 사례별로 인간의 번영을 앞당길

수 있는지, 또는 후퇴시킬지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 기술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이것은 기술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최근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통해 특정 야생 동식물의 전체 개체에 특정 유전 요소를 기하급수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기술이다. 2012년 개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조작에 사용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말라리아와 지카 바이러스처럼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매개체인 모기를 박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아카데미의 보고서는 유전자드라이브 기술개발을 권장하지만 조작된 유기체가 야생상태에 방출되기 전에 실험실이나 소규모 현장 연구에서 신중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를 다루는 기업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생태계 교란이라는 생태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태윤리를 기업윤리의 제일 덕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에이즈(HIV), 암, 혈우병, 선천성 안질환 등의 질병 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미 배아세포에 빈혈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를 절단하거나, HIV 질환 면역 수정란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성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미래 의료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기술이 분명하지만 오남용과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장에서 규범준수 여부의 모니터 문제

연구 및 기술 확산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준수여부를 모니터하거나 상습적 위반자의 책임을 추궁할 능력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 예컨대, 몇몇 유독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상식적인 규정이 있지만, 규제담당자가 화학물질 현장을 조사·감시하기에는 재정이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21세기에 규제당국과 기업의 협력 메커니즘은 필수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이를 강제하는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안전일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 기업은 개인과 사회가 신기술 때문에 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기존 규제기관의 가장 주된 임무는 안전을 증진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수단의 소유에 관계없이 기술의 편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 거버넌스는 공정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경제적 부를 가진 소수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야생지역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책무의 강조는 4차 산업혁명의 논의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경제발전예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환

경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막대한 힘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힘의 현명한 사용을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4대 윤리문제를 충분히 모니터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각계 전문가의 참여, 특히 (기업)윤리 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위의 4대 이슈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윤리경영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없다.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은 담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허위과대광고는 반드시 걸러져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뿌리내리며 투명경영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윤리경영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참고**

- <http://www.businessinsider.com/ethics-and-the-technology-industrial-revultion-2016-11>

1.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 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18개국 22개의 회원기관 및 국제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8개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장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청렴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술대회도 구성되어 그 어느 대회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컨퍼런스 개최사를 통해, "권익위는 출범 이후 9년간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부패방지, 민원처리, 제도개선,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며 옴부즈만의 활동 기반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5&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4360&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 한국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건강보험 급여 정지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5월 24일 건강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처분 사례에 해당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대 병원 의료인 등에게 약 26억 원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 등 30개 품목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고,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치매치료제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24일부터 6개월 간 정지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은 해당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을 고려한 기간이다.

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성과 평가제도 개편,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059551017.HTML?from=search>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1442.html?main_hot3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302000198>

3.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 독과점 우려” 자산매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합병한 글로벌 화학업체인 듀폰과 다우에 대해 자산매각을 명령했다. 산(酸) 공중합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3위 업체인 두 곳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4월 9일 이들에 대해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판매와 관련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밝혔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도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분야의 경쟁 제한 가능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 공중합체 시장은 합병 이전 듀폰, 엑손모빌, 다우 빅3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듀폰과 다우의 결합으로 이들이 시장의 48%를 차지하게 되면서 단독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가격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 결합에 대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07000596>

해외 동향

1. 인니, '원유유출' 태국 국영석유사에 "2조 3000억 원 물어내라" 소송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킨 태국 국영석유사를 상대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5월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8년 전 티모르 해에서 원유유출 사고를 낸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와 자회사 2곳을 상대로, 5월 5일 자카르타 법원에 27조 4000억 루피아(약 2조 3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로세노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차관은 "이 시설에서는 이후 10주간 수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돼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줬지만, PTT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와 여타 피해국에 있는 PTT 자산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PTT와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누사텡가라티무르주(州) 주민 만 3천여 명은 작년 8월 PTT를 상대로 2억 호주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인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출된 원유로 주 소득원인 해초 수확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TT는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원유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연근해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구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부인해 왔다.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5/06/0619000000AKR20170506026100104.HTML>

2. 美법무부, 우버 '불법 영업 프로그램' 범죄혐의 조사 착수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려고 개발·이용한 비밀 소프트웨어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우버가 개발한 '그레이볼'(Greyball)이라는 소프트웨어다. 이 프로그램은 우버가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합정수사를 하는 교통 당국 단속 담당자를 식별해 탑승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관이 우버 차량을 호출하면 처음에는 예상 요금과 함께 탑승 가능한 차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취소' 메시지가 뜨는 식이다.

우버 운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사용했으며, 우버 법률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야 언론을 통해 우버가 이 프로그램을 프랑스 파리과 미국 보스턴,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한국,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버는 앞서 이 프로그램이 "우버 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경쟁업체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이들, 당국자와 공모해 합정을 파려는 반대자들의 호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5/05/0619000000AKR20170505057900009.HTML>

3. "생명 구하는 AI" 페이스북, 인공지능 기술로 자살 막는다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 생방송 서비스인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 연달아 발생하자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이용자 자살 방지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3월 1일 블로그를 통해 AI로 이용자 게시물 내용에서 자해 또는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자살 의심 행동이 보이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게시물에 '우울', '고통'과 같은 내용이 나오거나 친구들이 "너 괜찮니?", "네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 경우 이를 선별한다.

이후 페이스북 내 직원들이 이를 재빠르게 검토하고 자해 위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한다. 또 국립섭식장애협회, 국립자살방지생명선 등 지원 단체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자살 또는 자해'나 '폭력' 등의 분류 버튼을 눌러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와 연락하거나 구조단체에 연락하는 등 시청자가 할 수 있는 지원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은 우선 미국 전역에서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3/03/0608000000AKR20170303086000009.HTML>

국내외 행사소식

(국내)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빛가람 혁신도시 기관 및 지자체간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청렴의지를 전파 및 확산하는 지역축제. 축제 개막식 및 참여기관 별 청렴문화 행사 개최.

주최: 광주·전남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 공동

일시: 2017년 6월 19일 ~ 6월 23일

장소: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국내)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선임심사원 양성과정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협하는 위험관리 및 정보보안의 위험식별 등의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임심사원 양성과정

주최: BSI

일시: 2017년 6월 20일 ~ 6월 24일

장소: 서울, BSI Training Center

<https://www.bsigroup.com/ko-KR/iso22301/training/ISO-22301-/>

(국내) “신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 조찬 포럼

기업청렴 포함,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하는 조찬 포럼

주최: 한국투명성기구

일시: 2017년 6월 1일 (07:30 ~ 09:00)

장소: 서울, 반포원

(국외) Sustainable Development & Planning 2017(지속 개발 및 계획 설계 컨퍼런스)

정책입안자, 환경문제 전문가, 건축가, 기술자 및 경제학자가 함께 모여 지속적인 경영을 설계하는 컨퍼런스

주최: Wessex Institute

일시: 2017년 6월 27일 ~ 6월 29일

장소: Bristol, UK

<http://www.wessex.ac.uk/conferences/2017/sustainable-development-and-planning-2017>

(국외) Procurement Anti-Corruption Training(반부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건전한 반부패 전략으로 공공 조달의 부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현장교육과 원격 학습을 결합한 5주 프로그램)

주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일시: 2017년 7월 17일 ~ 8월 18일

장소: Laxenburg, Austria

https://www.iaca.int/opentrainings/procurement_training.html

윤리경영 Step by Step

확산기 1단계 -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윤리경영의 확산기는 윤리경영을 심화, 촉진하는 단계로서 임직원의 윤리교육,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윤리경영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 컴플라이언스체계 도입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즉, 윤리경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Q. 윤리경영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방법이 있을까요?

윤리교육의 목적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윤리적 판단 기준을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체화시키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사의 윤리규범과 기업철학, 윤리경영의 역사 및 의사결정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이 교육대상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의 목적은 자사의 비전이나 전략적 목적 등과 일치해야 하겠지요. 또한, 윤리경영의 기업문화정착과 윤리적 의사결정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강사로는 외부 윤리분야의 전문 강사와 자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사 기준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부 실무진 중심의 강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실시할 차례인데요, 어떤 교육방법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시는지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워크숍 등과 같은 오프라인 교육, 혹은 사이버 교육이나 모바일러닝 형태의 온라인교육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거나 가끔은 이벤트성 행사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임직원에게 적합한 방식의 교육을 반복적, 일상적으로 실행하여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교육 진행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 ☞ **집합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의 언어적인 전달 효과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청중과 교감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집합교육은 윤리경영 초기 시행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교육생의 토론이나 의사결정기술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 업무공백의 발생,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워크숍**은 최근 윤리경영 이슈에 대해 토론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이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숍 활동은 타 교육방법에 비해 학습 효과가 높

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대효과는 Q&A와 쌍방향토론, 조직의 비전, 미션 및 가치의 공감을 통한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각적인 사고 개발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의 강화입니다. 워크숍도 집합교육의 한 형태이므로 현장의 업무공백 발생과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 **사이버 및 모바일러닝**의 장점은 학습자 주도형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장소 및 집합이 불필요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수단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집중효과가 떨어지고 토론학습 및 실습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최근 기업에서 선호하는 교육의 한 형태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플래시,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구현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청탁금지법, 성희롱,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연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이론과 사례 중심의 재미있는 만화로 학습한다면 수강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지요? 물론 시간은 법적 의무 시간이 있는 경우 따라야 하겠지만,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30분 내외의 학습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1~3분 정도의 짧은 영상 여러 개를 매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 토크콘서트, 도전 골든벨** 방송을 모방한 **청렴·윤리 골든벨** 등의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벤트성 행사도 있으며 **역할극(role play)**이나 **연극, 뮤지컬 관람** 등도 이색적 학습 형태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했다면, 교육실행담당자는 그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윤리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차후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 교육이 완료되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 서명 받기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
- 교육대상자의 교육만족도(교육내용, 시간, 강사능력, 만족도, 개선사항 등)를 측정,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윤리경영 활동보고서와 함께 윤리담당부서로 통보
- 윤리담당부서는 윤리교육 효과측정 결과를 윤리경영 실천상황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윤리실천력 향상 방안을 강구

아울러 각 부서 또는 현장의 윤리실천책임자는 자체윤리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윤리교육 내용 개선, 부서 자체 윤리교육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이제 타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살펴볼까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도전 윤리골든벨~!

- aT윤리청렴주간을 맞이해서 도전 윤리골든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즐기는 윤리, 함께 하는 청렴'을 모토로 60여 명의 직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윤리골든벨 울리기에 도전했습니다. 두 시간여의 접전 끝에 우승한 팀에겐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 울산항만공사(UPA)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공연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졌습니다.
 - 스스로 청렴하다고 자부하는 연극 속 공직자들에게 미션을 통해 청렴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밝혀내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연극을 2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윤리교육 실행은 어느 정도인지 자가진단 해볼까요?

1	우리 회사의 신입직원은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우리 회사의 기존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우리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윤리경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하며 반복 교육 실시가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윤리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직원들의 인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Step에서는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공유 및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윤리경영론의 콘서트, 김성수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별 기업윤리경영모델
- 한국 기업의 윤리교육체계에 관한 사례연구, 김용식, POSRI 경영연구 제7권 제2호 2007
- <http://blog.naver.com/gr22nade/60203787961>
-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1900145653925>

사례돋보기

변화의 진통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진통이 따라붙는다. 이는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급격한 변화로 야기된 이전과는 다른 요구와 환경 속에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윤리적 리스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각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된 윤리적 리스크를 살펴보면 AI, IoT, 클라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윤리적 리스크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1차 산업혁명(기계화 시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차라는 이동수단을 발전시켰고 운송의 발달은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들였다. 농업 중심이던 사회는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도시화의 문제

도시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곳으로 인식되었고,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대대적인 이농 현상은 농촌인구의 절감과 도시의 인구 밀집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자 도시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이주자들의 주택 부족이었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된 가구도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환경오염 역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아직 자연 훼손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았고, 공장들 역시 오염물질을 방출했다. 치안도 나빠져 매일 같이 각종 범죄가 일어났지만, 이를 모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노동자와 자본가

도시 주변으로 생겨난 공장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공장의 주인인 자본가는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반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턱없이 적었다. 자본가에게 있어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노동자에게는 참정권이 없었기에 노동 착취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성인 남성은 물론, 여성과 아동들까지 노동에 동원되어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공장법'이었다. 이 1802년에 제정된 '공장법'은 12시간 이상의 노동 및 심야작업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계속 개정되어 1847년에는 원칙적으로 1일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였다.

◎ 2차 산업혁명(자동화 시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이어진 2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의 시대였다. 철강 산업의 발달은 기계화를 더욱 진전시켰고 여기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인력 없이도 기계를 돌리는 자동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기술혁신의 주체

화학과 전기, 통신 등이 발달한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다양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에디슨의 전등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등의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 전선을 생산하는 회사 등 전기와 관련한 많은 회사가 필요했다. 에디슨은 이 전기 산업 관련 회사들을 1889년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Edison General Electric)사로 통합하였고, 이 회사는 GE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해지자 자연스럽게 2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대기업이 그 주축을 맡게 되었다. 경제와 사회가 대대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중심에 서 있는 대기업들이었기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했으며, 사람들이 대기업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제품 생산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의 부품화

1936년 개봉한 영화 《모던타임즈》는 산업화 시기의 미국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모던타임즈》의 찰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 나사를 조이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모든 사물이 나사로 보이고(신경쇠약) 이를 조이려하는 증세(강박)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런 노동자의 상태는 아랑곳 않고 공장주는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급식 기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장법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문제가 산재해있었다.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계화 촉진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규정이 미비해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공장 입장에서 산재로 일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는 돈 몇 푼을 쥐여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일할 사람은 많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처럼 본 것이다.

◎ 3차 산업혁명(정보화 시대)

20세기 후반, 사람들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이다. 공간의 제약을 풀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에서 기업은 또 한 번 생각지 못한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와 위기의 장, SN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은 점차 국가행정-기업-일반에게 퍼져가며 전 세계인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바로 SNS의 발달이다. 전

세계인을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 끌어 모은 SNS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SNS 세상의 소비자들은 소비자로서 제품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나 콘텐츠보다 같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는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다. 기업에게 고객은 강력한 감독관이자 영업사원이 된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지능화 시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IoT와 AI 등으로 대표되며 3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합치되는 세상이다. 온라인 세상의 정보로 오프라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보를 보호하라

3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 세상이 등장하고 SNS가 발달하자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재미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고객들의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람의 정보가 곧 자산이 된 것이다. 그러자 금은보화에 도둑이 꼬이듯 기업이 모아둔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업은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와 고객의 취향, 관심사 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래 광고되는 인공지능 홈비서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그 사용자가 어떤 방송을 좋아하는지, 주로 듣는 음악은 무엇인지, 평균 귀가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보관(기억)한다. 생활패턴까지도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단 한 번의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2차 피해로 이어질지 가늠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기업들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하거나 신체 정보를 이용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논의와 개선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고객과 사회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노동환경에는 개선이 필요하며, 실업자(취업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다. 기업이 SNS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과거의 문제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이 할 일은 완벽한 정답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의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개선하고 변화하는 것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보안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 역시 끊임없이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탐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tegoryId=42346>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101&cid=43114&categoryId=4311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233&cid=41799&categoryId=41800>
- <http://blog.daum.net/windada11/8769399>
- <https://namu.wiki/w/%EC%82%B0%EC%97%85%20%ED%98%81%EB%AA%8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420&cid=40942&categoryId=3181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48311&cid=42021&categoryId=4202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072&cid=42621&categoryId=44422>
- <http://www.redian.org/archive/75417>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1976&cid=41995&categoryId=4199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243&cid=42171&categoryId=42180>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7352
- http://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25932&bcIdx=18293&parentSeq=18293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385397&memberNo=11534881&vType=VERTICAL>

지식1g - 아니타 카스틴의 실험

“이 종이에 ‘a’와 ‘b’를 반복해서 적어주세요.
종이가 부족하다면 더 가져가서 적으시면 돼요.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땐 언제든 제게 말씀하세요.”

한참동안 ‘a’와 ‘b’를 쓰던 실험 참가자는
손이 떨리고 정신적으로 지친 후
실험을 그만 두겠다고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에
이름하고 주소 좀 적어 주시겠어요?”

그러자 실험 참가자는
더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을 것 같던 손으로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아니타 카스틴의 실험은
변화를 통해 기존의 ‘패턴’을 깨는 것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을 바꿔주는 변화의 바람은
반복에 지친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되찾아준다.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U 유통업체 O 대리

-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여도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시대건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P 생산업체 Y 주임

- 사실 아직도 4차 혁명에 대해 모호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면 회사가 직원들이나 고객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 시대의 고객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 Q&A

<사례소개>

Case 1. 추억으로 만드는 스승의 날

지난 5월 15일은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다. 관례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께 선물을 건네던 날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미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기존과 같은 많은 꽃과 선물이 사라져 이상 아쉬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사라진 꽃과 선물의 자리에 마음과 추억을 담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스승의 날부터 시작되었다.

T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에서 있었던 추억을 공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선정된 60개 학급에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간식 등 응원의 선물이 전달되었고, 선정되지 못한 학급에는 간식과 감사편지를 전달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Case 2. 식사 쫓이야?

공연기획사 대표 A는 공연을 앞두고 공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두 명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의 식사 값은 1인당 5만 원 가량이었고, 그 자리는 A씨가 계산하였다.

- 재판부는 규정 이상의 식사를 접대 받은 공직자 두 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들이 수수한 식사 값의 2배였다. 반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A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2배의 과태료이긴 하나, 두 사람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두 명의 공직자와 A씨 외에 A씨의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액은 A씨와 같은 20만 원이었다.

*참고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75>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87982>
- <http://news.joins.com/article/2146122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059700001.HTML?input=1195m>

퀴즈

Q. 다음 중 각 산업혁명과 기업이 깊어지게 된 윤리적 리스크가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1차 산업혁명 - SNS시대의 소비자
- ② 2차 산업혁명 - 인간의 부품화
- ③ 3차 산업혁명 - 대기업에 대한 책임 증대
- ④ 4차 산업혁명 - 도시화로 인한 문제

● 지난 호 정답 : 4번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aypark@korea.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자는 조진혁님, 조미나님, 유광열님, 강동원님, 남상호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